상호관세·주한미군 방위비 등 합의 시급

李 대통령, 이달 말 목표로 '韓美 정상회담' 시기 조율 중

성사될 경우 李 대통령 美 방문
美 국무장관 방한해 시기·의제 논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내달 8일 만료
시한 연장하거나 합의 타결 가능성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7월 넷째 주를 목표로 미국과 한미정상회담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AP/뉴시스

한국과 미국이 7월 말 양자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사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7월 넷째 주(21~26일)를 목표로 미국 측과 한미정상회담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다만 시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대통령실은 8월 이전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달 10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 회의를 전후로 방한하게 되면, 정상회담 시기와 의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내달 말 열리게 된다면 상호관세 협상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기간은 내달 8일 만료된다. 최근 미 행정부는 상호관세의 유예시한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을 보인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 실무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협상 기한 연장을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관련 질문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장)할 수도 있다. 별일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대만,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일부 국가들과 무역 협상 합의에 근접해가고 있다"며 "한국, 베트남과의 합의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26일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까지 "우리는 선두 10개 합의(Top 10 deals)를 하고, 그것들을 범주화해 다른 나라들이 그에 맞추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된 나라들과는 합의를 하고, 우리와 협상 중인 다른 모든 나라는 우리로부터 답을 받은 다음, 그 패키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예시한을 연장하거나, 내달 8일 전 합의를 극적으로 타결할 가능성도 있다.

국방비 증액 문제도 어려운 협상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처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의 방위비는 GDP의 2.8%로, 약 66조원 규모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대로 하면 거의 두배인 120조원이 되는 셈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당초 지난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24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과 중동발 변수로 연기됐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국민의힘 의원총회

전당대회까지 '송언석 비대위' 체제 전환

내달 새 당 지도부 결정될 때까지 겸임
비대위원에 박덕흠·조은희·김대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1일부터 '송언석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8월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송 원내대표가 의총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가 마무리된다"며 "내일(1일) 새 비대위원장으로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위원장을 맡아서 최고의사결정기구를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 당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며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기엔 제약 조건이 있지만, 이 비대위에서부터 우리당이 환골탈태해서 거듭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이 없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줬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대위원들도 확정했다. 비대위원에는 4선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의원, 재선의 조은희(서울서초구갑) 의원, 초선의 김대식(부산사상구)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비대위원 2명은 원외 인사 중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 홍형선 화성시갑 당협위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예진 기자

李 대통령,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통령, 박천휴 뮤지컬 작가, 김원석 감독. /뉴시스

상법개정 전향적 검토… "與 추진안, 과잉규제 우려"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구체적 협상방향 언급은 없어

국민의힘이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이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만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기업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상법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단체장 간담회 당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간담회에서) 경제6단체장들에게도 '그냥 (상법개정에) 반대만 하고 있어서는 효율적인 대화가 되기 어렵다, 대안을 가지고 상의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오늘(30일) 6단체장들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그런 얘기를 했을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취재진들에게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밸류업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해왔고, 상법개정도 사실 보수진영에서 먼저 검토했었다"면서 "자본시장 동향을 보면 저희가 기존에 검토했던 자본시장법(개정)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與 "무한정 시간 갖고 논의할 사안 아냐"

›› 1면 '與 상법개정 결단…'서 계속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상법 개정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송 남발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나 경영판단·경영권 보장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부회장은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부처 장관과 이견을 조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공정 성장(이란) 국민주권 정부의 성장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경제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 추후 논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 5000특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기업의 입장에서 형사적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을 다양하게 들었다"며 "하반기에 여러 차례 논의하면서 정기국회 과정에서 처리해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조금 나중에 하자는 것은 상법개정안을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그럴 수는 없다고 했다"며 "지난 1년 내내 논쟁해 왔고 국민과 소통했다. 지금은 결단할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원내부대표도 "상법 개정은 무한정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미 시장에 상법 개정을 전재로 한 많은 기대가 반영된 상태"라며 "지금 나와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도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신속히 추진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경제계가 우려하는 소송 남발, 배임죄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대체적으로 경영적 판단(에 대한 재량을 인정하는) 원칙을 통해서 이사들의 책임이 무한 확대되는 것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예진 기자